

# 개정 신용정보법 간담회

---

2020년 2월 20일(목)



금융위원회

금일 발표될 하위법령 개정 등의 내용은

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향후 법령 개정 절차상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 
주요 사항에 대해 부분적으로 **정식 입법예고 절차 전에 공개**하는 것으로

해당 내용은 **확정된 내용이 아니며** 추후 내부 논의, 의견수렴 결과 반영, 기타  
법령 개정 작업 과정에서 **전부 또는 일부가 수정**될 수 있습니다.

기타 금일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은 하위법령 개정 안 등은

**3월 중 있을 시행령 입법예고**를 통해 공개될 것이며,

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식적인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# 1.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경과

## 개정안 발의

- (’18.11.15.)
- 김병욱 의원 개정안 발의
- \* 추경호 의원 발의 (’16.6월), 박선숙 의원 발의(’16.12월), 송희경 의원 발의 (’17.7월)

## 국회 정무위

- (’19.11.28.)
- 법안1소위 통과
- (’19.11.29.)
- 전체회의 통과

## 국회 법사위

- (’20.1.9.)
- 전체회의 통과

## 국회 본회의

- (’20.1.9.)
- 본회의 통과

## 법 공포

- (’20.2.4.)
- 법 공포
- 공포 6개월 후 시행

## 2.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내용 - '가명정보' 개념 도입

신용정보법		개념	활용가능 범위
	개인정보	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,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	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內 활용 가능
	가명정보	추가정보의 사용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	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가능(EU GDPR 반영) ❶ 통계작성(상업적 목적 포함) ❷ 연구(산업적 연구 포함) ❸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
	익명정보	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(복원 불가능할 정도로) 조치한 정보	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
	○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개정 (4월 ~ )		

#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신용정보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 가능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 가명조치 또는 익명조치가 된 상태로 전달</li></ul></li></ul>
하위규정 고려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데이터전문기관 자격요건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(1) 민법상 비영리 법인</li><li>(2)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,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</li></ul></li><li>○ 데이터전문기관의 위험관리체계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(1) 데이터전문기관 업무와 그 외 업무 수행직원간 분리</li><li>(2)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서버와 그 외 서버의 분리</li></ul></li></ul>

#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## 하위규정 고려사항

### ○ 데이터결합의 절차

- (1) 금융위가 정한 양식에 따라 결합신청
- (2) 결합의뢰기관은 데이터에 포함된 식별값을 결합키로 대체 (의뢰기관 상호 협의 하 결정)
- (3)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결합대상 데이터 가명 또는 익명처리
- (4)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
- (5)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후 결합키를 삭제 또는 대체키로 전환
- (6)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
- (7) 결합데이터를 결합의뢰기관에 전달 후 결합데이터 및 원본데이터 즉각 삭제
- (8)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 관련 사항 기록 및 관리, 금융위 보고

# 빅데이터 분석·이용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

## 신용정보법

- 신용정보회사 등에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·시행 의무화
  - 가명조치에 사용한 추가정보는 일정한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
  -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 수립·시행
-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토록 하는 등의 의무 부과

# 빅데이터 활용 부작용 방지를 위한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

## 신용정보법

-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
  - 매출액 3% 이하의 과징금 부과
  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

#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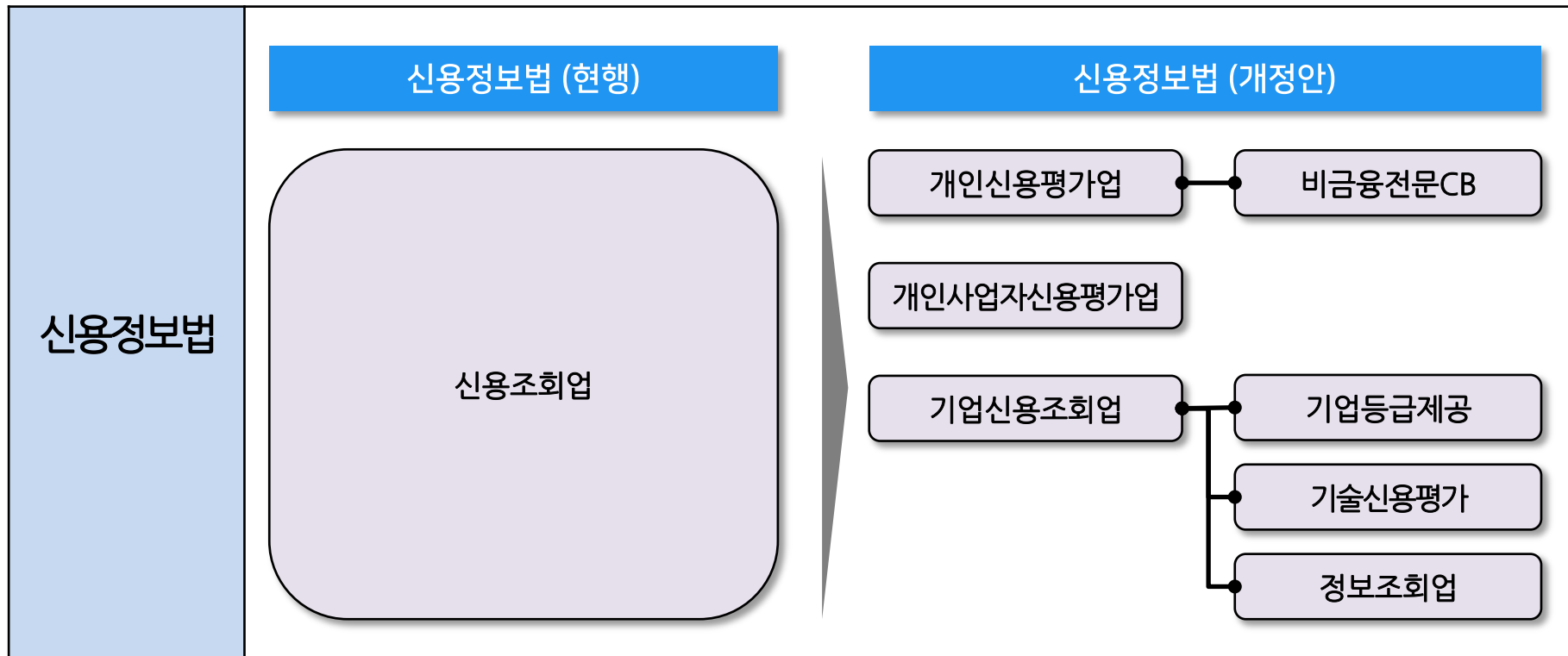
## 신용정보법

○ 상거래 기업 및 법인(금융회사 등은 제외)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집행(조사·제재) 기능 부여

- 자료제출요구·검사권·출입권·질문권 및 시정명령,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 부여

※ 「개보법」 개정안 : ❶ '개보위'를 행정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로 격상 ❷ 온라인(정보통신망법 : 방통위), 오프라인(개인정보법 : 행안부)로 나뉜 개인정보 관련 법집행기능을 개보위로 이관·통합

# 신용조회업무 정의 세분화



# 신용조회업 진입규제 요건 완화

신용정보법	신용정보법 (현행)			➔	신용정보법 (개정안)			
	인가단위	최소자본금	금융회사출자요건		인가단위	최소자본금	금융회사출자요건	
	개인CB	50억원	적용(50% 이상)		개인CB	50억원	적용(50%이상)	
					① 비금융전문CB	5억원/20억원*	배제	
					② 개인사업자CB	50억원	적용(50%이상)	
					기업 CB	기업등급제공	20억원	적용(50%이상)
						기술신용평가	20억원	적용(50%이상)
						정보조회업	5억원	배제
	* (5억원) 비정형 데이터, (20억원) 대량의 정형 데이터							
하위규정 고려사항	○ 인적요건 : (개인CB업, 개인사업자CB업, 기업CB업) 3년 이상 신용평가업무 종사자 등 10인 이상 (전문개인CB업) 3년 이상 신용평가, 분석 업무 종사자 2~5인 이상 (기업정보조회업) 3년 이상 신용평가업무 종사자 등 2인 이상 (기업정보조회업 + 전문개인CB업) 3년 이상 신용평가, 분석업무 종사자 5인 이상							

\* (5억원) 비정형 데이터, (20억원) 대량의 정형 데이터

#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

## 신용정보법

- ‘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’ 도입
  -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
  - 개인신용평가회사, 기업신용조회회사 외에 신용카드업자도 겸영업무로 수행 가능

#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

<p>신용정보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업을 허용</li> <li>○ 데이터 분석·가공, 컨설팅 등 <b>겸영·부수 업무 수행 가능</b></li> </ul> <p>※ <b>부실채권 매입,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대리업무는 법 개정 이후에도 금지</b>되는 행위</p>
<p>하위규정 고려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공통)</b> 본인신용정보관리업, 전자문서중계업무 등,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금융상품 광고, 홍보, 컨설팅, 교육, 연구, 상담, 본인인증,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 등</li> <li>○ <b>(비금융CB)</b> 비금융사업자의 진입을 위해 비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제한없는 겸업 허용</li> <li>○ <b>(개인사업자CB)</b> 신용카드업 및 그 부대업무, 개인사업자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,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,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등</li> <li>○ <b>(기업CB)</b> 기업의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및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,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, 분석, 연구, 컨설팅, 자문, 기업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등</li> </ul>

#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성·책임성 제고

신용정보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 변경 승인 제도와 임원 자격 요건 등에 대해 현행 「지배구조법」에 준하는 제도 도입</li><li>○ 일정한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해 현행 「지배구조법」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 도입</li></ul>
하위규정 고려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대주주 요건은 기본적으로 동일</li></ul>

#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신설

<b>신용정보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해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</li><li>-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일정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때 정확성·공정성·투명성 등의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</li><li>- 성별·출신지역·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금지 등</li></ul>
<b>하위규정 고려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계열회사 상품 및 서비스 구매, 이용을 조건으로 신용평점 등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</li><li>○ 기업CB간 계열회사 신용평가를 위해 상호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</li><li>○ 정보의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의뢰인을 차별하는 행위</li><li>○ 신용평가의 요청인 등에게서 통상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하는 행위</li><li>○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</li><li>○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 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 등급을 미리 제공</li><li>○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등</li></ul>

신용정보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제로 도입</li><li>○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전송 받을 수 있도록 정보보호·보안 강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금융회사 등이 선정하여 사용·관리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접근매체를 보관·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</li></ul></li><li>○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,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 행사, 일정한 투자일임업·투자자문업 등을 부수·겸영업무로 허용</li></ul>
하위규정 고려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통신구간 암호화시스템, 백업 및 복구시스템,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, 보유정보의 적절한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성능을 갖출 것,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에 가능할 것</li><li>○ 방화벽 및 데이터 암호화 처리체계를 갖출 것, 침입 탐지 등 보안시스템 구축, 내외부 네트워크 분리 운영, 외부침입 방지 등</li><li>○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,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등</li></ul>



## 하위규정 고려사항

### ○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

#### (1) 비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겸업 허용

- 다만, 마이데이터 사업과 겸업을 허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비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단계에서 허가정책상 제한

#### (2) 전자금융업, 대출중개 및 주선,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문, 일임

#### (3)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등

### ○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지행위

#### (1)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권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

#### (2) 전송요구권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어렵게 하는 행위

#### (3) 이해상충행위 방지 시스템 미마련

#### (4) 정보주체 개인 요구시 보유 데이터 즉각 삭제 등

#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·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

신용정보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본인의 채권자변동정보 열람·교부 요구 가능</li><li>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회사 간의 정보공유 지원 기능 외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공적 역할 수행</li></ul>
하위규정 고려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채권자변동정보 등록대상자: 금융회사, 대부업자, 공제, 보증기관 등</li><li>○ 등록대상 거래: 신용공여,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, 대부계약, 보증기관 대위변제채권 등</li><li>○ 등록대상 정보: 최초 대출일, 채권 양수도 내역, 채권원금, 채권소멸시효, 가압류 등 집행일 등</li></ul>

#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설치

## 신용정보법
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설치
  -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, 평가모형의 예측력, 안정성 등 심의
 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평가 등의 정확성·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

# 정보활용 동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의할 수 있는 여건 마련

## 신용정보법

-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개선(단순화·시각화)
  -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활용
  -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시 고지사항의 **중요사항**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
  -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할 경우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야 함

# 정보활용 동의등급 부여

## 신용정보법

- 금융회사 등의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위험,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 부여
- 금융회사 등은 그 동의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함

#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도입

신용정보법	○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, 정부·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다른 금융회사 등에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	
하위규정 고려사항	○ 신용정보전송요구권 행사대상  (1) 금융회사 등  (2) 예보, 한국거래소, 예탁결제원 등  (3) 전기통신사업자, 한국전력공사, 한국수자원공사 등  (4) 각종 공공기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 등	○ 신용정보전송요구권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자  (1) 금융회사 등  (2) 마이데이터 사업자  (3) 개인신용평가회사

#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도입

## 하위규정 고려사항

### ○ 전송대상 정보

- (1) MyData Working Group 논의를 통해 결정된 금융거래정보
- (2)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
- (3) 4대 보험,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납부정보
- (4)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료 납부정보 등 거래내역 정보
- (5)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

### ○ 신용정보이동권 행사 금지

- (1)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이동권 행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- (2)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방식 미준수
- (3)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요구임을 알게된 경우

### ○ 신용정보 전송 등의 절차

- (1) 최근 5년 내 정보는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
- (2)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전송요구권 행사내역을 연 1회 이상 통지

# 자동화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권 보장

신용정보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자동화평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권 도입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자동화 실시 여부 및 자동화평가의 결과 및 주요기준, 기초자료 등의 설명 요구 가능</li><li>-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·삭제,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 요구 가능</li></ul></li></ul>
하위규정 고려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적용대상 기관 : 금융회사 및 신용조회회사</li><li>○ 적용대상 거래 : 개인신용평가, 여신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, 금융거래 신청에 대한 승낙 여부 결정</li><li>○ 불인정사례 : (1) 정정 요청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, (2)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 행사</li></ul>



# 개인신용정보 활용·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도 도입

<b>신용정보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</li><li>○ 점검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여 금융감독원 검사시 활용 가능</li></ul>		
<b>하위규정 고려사항</b>	<table><tr><td data-bbox="357 726 1130 933"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적용대상 기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선임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</li><li>* 대부업자는 총 자산 100억원 초과 대상자로 한정</li></ul></li></ul></td><td data-bbox="1168 726 1864 933"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적용대상 항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신용정보법 준수와 관련된 72개 항목</li><li>* 금감원 시행세칙 규정 예정</li></ul></li></ul></td></tr></table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적용대상 기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선임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</li><li>* 대부업자는 총 자산 100억원 초과 대상자로 한정</li></ul>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적용대상 항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신용정보법 준수와 관련된 72개 항목</li><li>* 금감원 시행세칙 규정 예정</li></ul></li>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적용대상 기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선임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</li><li>* 대부업자는 총 자산 100억원 초과 대상자로 한정</li></ul>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적용대상 항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신용정보법 준수와 관련된 72개 항목</li><li>* 금감원 시행세칙 규정 예정</li></ul></li></ul>		

# 신용정보회사등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

## 신용정보법

-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강화
  - 손해액의 3배 → 5배

### 3. 향후 추진계획

---

현재 범정부 데이터 경제 T/F (기재부 1차관 주재) 를 통해  
데이터 경제 3법 하위법령 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

데이터 경제 T/F 논의 결과 및 금일 수렴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 
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

**감사합니다!**